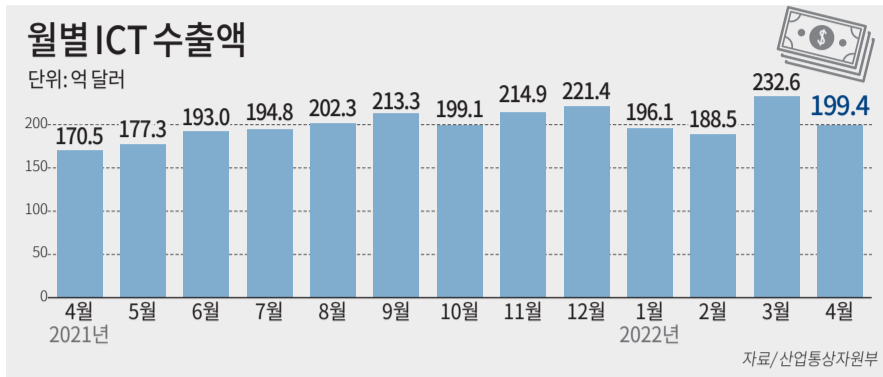


4월 ICT 수출액 199.4억弗…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글로벌 비대면 구도 긍정적 작용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요 증가 1월~4월 누적 수출액 사상 최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 19 지속, 중국 봉쇄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등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ICT) 수출 증가세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ICT 수출은 199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였던 전년 동월(170.5억달러) 대비 16.9% 증가했다. 이에 ICT 수출은 23개월 연속 증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휴입업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8억5000만달러(23.5일)로 전년 동월(7.1억달러, 24.0일) 대비 19.4% 증가했고, 4년 전인 2018년 7억4000만달러

(23.0일)를 훌쩍 넘어서 역대 4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1~4월까지 누적 수출 역시 816억6000만달러로 기존 최고치였던 2018년(693.4억달러) 기록을 크게 앞지르며 갈아치웠고, 전체 산업(576.9억달러) 대비 ICT 수출 비중은 34.6%로 집계됐다.

ICT 수출 호조세는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안착이 긍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전체 무역수지는 -26억6000만달러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ICT 수입액은 121억3000만달러(12.4% ↑)로 ICT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5억5000만달러 증가한 78억1000만달러로 흑자 폭을 키웠다.

중소·중견기업도 반도체와 접속 부품,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다. 지난달 중소중견기업 ICT 수출은 4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반도체(16.0% ↑), 디스플레이(22.5% ↑), 휴대폰(0.6% ↑), 컴퓨터·주변기기(58.0% ↑) 등 주요 4대 품목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09.0억달러로 1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했고, 2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역대 4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등 전방산업 수요 지속으로 20개월 연속 증가했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2개월 연속 40억달러를 상회,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디스플레이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모바일용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수요가 지속되면서 20개월 연속 증가했고, 휴대폰은 중국 위주로 카메라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분품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가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4월 수출액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4.1% ↑), 베트남(25.8% ↑), 미국(25.9% ↑), 유럽연합(23.2% ↑), 일본(15.5% ↑) 등 주요 5개국으로의 수출 모두 12개월 연속 증가다.

중국의 경우 지난 3월28일 상해 봉쇄령 이후 해당지역 생산·소비 위축 등에도 주요 품목 모두 증가했고, 베트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위주로, 미국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이어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 홍수·장마 등 자연재난 비상대응체제 가동

환경부 선제적 관리체제 구축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 방침



손욱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올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비상대응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환경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비상대응체제를 구축,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에는 대기 불안정,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주민소통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홍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수 위험 지역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홍수 대책 상황실 운영, 수해방지 자재 홍수취약지구 근거리 비축, 합동 모의 훈련 추가 실시 등을 진행한다. 홍수 피해 발생시 원인조사 등을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지정된 홍수취약지구 433곳은 배수문 설치 등 작업을 홍수기 전까지 완료한다. 완료를 못한 곳은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방침이다.

폭우가 예상되는 시기 소양강댐 등 19개 다목적 댐의 수위도 낮게 유지해 홍수 조절 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홍수기 제한수위 이내에서 용수공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수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댐을 운영한다. 북쪽댐 방류에 대비해 홍수특보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을 강화한다.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도심지 침수 가능 지역을 예측한 침수위험지도 활용 등 중장기 홍수대응 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3년까지 국가-지방방위 합류부 등 2730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국내 주요 닭고기 생산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오른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생닭과 닭고기 가공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스1

토종닭 신선육 비싸진 이유 있었다 공정위, 하림 등 9개업체 담합 적발

과징금 5억9000만원 부과

치킨용 닭인 육계와 삼계탕용 닭에 이어 백숙 등에 쓰이는 국내산 토종닭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도 담합 대상이 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담합 장구 역할을 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토종닭 신선육 담합에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9곳이 가담했다.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종닭은 백숙과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한국 고유 품종의 식용 닭고기로,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나 삼계탕용 닭과 구분된다.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도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 다양한 가격 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되는데, 이들 9개사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냉동비축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은 2013년 5월 ~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9개 사업자 중 농협목우촌만 제외한 8개사가 구성사업자로 가입한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나 관련 사장단 회의 등이 주로 담합 장구로 활용됐다.

이들은 담합 기간 중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담합했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하림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 29일 북반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하림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마니커 등은 2015년 하반기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 비축하고, 이를 약 6개월간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또, 토종닭 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인용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무역위원회 “미·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관세 부과 연장”

덤핑방지 종료시 산업피해 가능성 판단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해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고,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대상물품 가격 하락이나 수입량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는 향후 5년간 20.10~

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오는 7월 중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와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무색 투명한 액체다.

무역위는 앞서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조사 검증,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아울러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주식회사 로닉은 지난해 4월1일 국내 기업 두 곳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분쇄조리기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두 곳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세종=한용수 기자